그린 데탕트를 제안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사람을 포함한 지구생명체의 최대 위협은 기후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그리고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일례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막식에서 "인류는 기후변화에 있어 오래전에 남은 시간을 다 썼다"며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위기에 비해 경각심은 덜 하지만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경쟁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대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비공식 핵보유국들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란 핵협정의 부활 여부도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각종 군비통제 조약도 하나둘씩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 19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군사비도 폭등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세계 GDP가 4.4%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군사비는 2.6%나 늘어났다. 총액으로는 약 2조 달러로 군비경쟁이 치열했던 1980년대에 비해 약 55%나 높아졌다.[1] 이러한 군사비 증가 추세는 2021년과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냉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군비경쟁에 있었다면,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노벨상을 수상한 50여명의 사람들은 작년 12월에 "인류를 위한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세계 각국이 5년 동안 매년 2%씩 군사비를 줄이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염병, 기후위기, 극한 빈곤 해결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에 호응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왜 '그린 데탕트'인가?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린 데탕트'라는 표현을 떠올려봤다. 찾아보니 그린 데탕트라는 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한 때 유행했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산림협력도 비슷한 취지를 품고 있다.

기존의 그린 데탕트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었다. 기후 환경 분야의 협력이 증진되면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실제의 남북관계는

---

1) SIPRI. 2021. "SIPRI Yearbook 2021: Summary." https://sipri.org/sites/default/files/2021-06/sipri_yb21_summary_en_v2_0.pdf. (검색일: 2021.11.20.).

기후 협력은 겉돌고 군비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그린 데탕트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더더욱 현실성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산림협력도 공허한 측면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COP26에서 남북한 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있을 때, 한국 상공에는 200여대의 군용기들이 날고 있었다. 한·미 양국이 2021년 11월1일부터 5일까지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한 것이다. 200여대가 내뿜은 온실가스의 양은 상당하다. 대략적인 탄소 배출량을 3천톤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1700대의 차량이 1년 동안 내뿜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으로 배출된 탄소량을 상쇄하려면 약 4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력'과 군사훈련을 비롯한 군비 '경쟁'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남북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다른 관점에서 그린 데탕트를 정의하고자 한다. "군사 활동 축소를 통한 기후위기 대처와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즉 평화 사이에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기후위기야말로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구 온난화를 "우리 세계의 심각한 파괴력"이라고 부르면서 미국 국가안보에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둘째, 군사 활동 자체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군사 활동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이다. 이는 민간 분야의 항공(1.9%), 해운(1.7%), 철도(0.4%), 파이프라인(0.3%)을 합한 것보다 많다. 그런데도 지구라는 행성에 군사 분야는 마치 별개의 행성처럼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회원국들에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의 배출 보고는 여전히 '자발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을 정도이다.

셋째, 군사 활동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악화된 기후위기가 갈등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극한 기후는 이미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온이 섭씨 1도가 높아지면 폭행과 살인 등 개인들 사이의 폭력은 2.4%가 늘어나고 폭동과 내전과 같은 집단들 사이의 분쟁은 11.3%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끝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오히려 고조되어왔다는 것이다. 가령 세계 양대 탄소 배출국이

자 군비지출 국가들인 미국과 중국은 기후위기 대처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극심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후위기에 기름을 붓고 기후위기 대처에 필요한 자원을 군비경쟁으로 탕진하면서 말이다.

이처럼 군사 활동은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이면서도 기후위기 대처에 '거대한 예외지대'이자 '빈 구멍'으로 남아 있다. 기후위기라는 압도적인 힘에 대응하려면 비상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상당수 국가들의 정치적 선택은 군비증강에 쏠려 있다.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지구촌의 군사 활동은 막대한 탄소를 내뿜으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정작 군사 활동 증대로 그 위협을 더 키우고 있다. 모두 안보라는 이름을 달고선 말이다. 그린 데탕트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후위기와 신냉전의 슬기로운 대처법으로 '군축'을 지구적 의제로 삼아보자는 취지를 품고 있다.

3. 한국발 '그린 데탕트'를 제안한다

그린 데탕트는 지구적 차원의 과제인 동시에 한반도에서도 절박한 과제이다. 우선 한반도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0.74도 상승한 데 비해 한국은 1.7도, 북한은 1.9도 상승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또 구냉전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냉전이 한반도 상공에 엄습해오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잉태하면서 남북한 공히 선택의 압력과 연루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군사 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화위복의 상상력과 실천을 요구한다. 기후위기 대처를 핵심 화두로 삼으면, 한반도 평화와 국제적 신냉전 대처에도 전환기적 발상과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린 데탕트를 지구적 의제로 제시하면서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 위기가 군비증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국민 사이에선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그리고 세대를 떠나 대규모 군비증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군비증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MZ세대로 일컬어지는 2030세대와 청소년 세대에서 군사강국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다. 반면 이들 세대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겪게 될 세대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군비증강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생긴다. 미래 세대의 '주적'은 바로 기후 위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린 데탕트'의 취지를 담아 전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한국 사회도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의 224개 단체들이 COP26을 앞두고 군사 분야의 군사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지만, 224개 단체

들 가운데 한국의 단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한국이 대표적인 '기후 악당'으로 불려왔고 한국의 군사 활동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거꾸로 한국의 단체들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면, 그린 데탕트 운동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셋째, 기후 위기 대처의 '거대한 빈 구멍'을 한국에서부터 메우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의 군사 분야의 탄소 배출 현황은 거의 공개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알려진 바도 거의 없다. 그러나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8위의 군사비 지출, 50만명이 넘는 병력수와 전국에 산재한 기지, 다양한 군사 훈련 및 무기와 장비 체계, 방위 산업의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군사 분야 탄소 배출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의 탄소 배출 보고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투명성과 완전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 위기 대처를 국방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기후 위기에 취약하면서 군비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린 데탕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아우르면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군사 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기후 위기를 정책과 전략의 핵심 의제로 삼으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악재로 작용해온 군사 훈련의 하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탄소 배출이 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자제를 제도화하고 야외 기동 훈련도 축소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하면서 북한에게도 상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도 기후 위기 및 남북한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전투기·헬기 및 경항공모함 사업, 그리고 각종 전차와 장갑차 사업의 축소와 철회가 대표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 각종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들 사업의 축소와 철회는 군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항공모함을 예로 들어보자. 군용기를 실고 다니는 항공모함 역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6만5천톤 급 항모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는 항공모함용 400만 리터와 전투기 및 헬기용 300만 리터 등 총 700만 리터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영국의 해군은 "이 연료로 자동차 127,000대의 연료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700만 리터의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 약 18,000톤의 탄소가 배출된다.[3)] 한국이 추진 중인 경항모는 만재배수량 기준으로 퀸 엘리자베스 급의 절반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경항모가 350만 리터의 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탄소 배출량도 9,000톤에 달하게 된다. 약 5천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내뿜는 탄소량과 비슷한 수치이다. 이는 거꾸로 이 사업을

---

2) 참여 방식은 다음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https://ceobs.org/military-emissions-cuts-where-do-we-go-from-here/.

3) Phil Miller. 2021. "ROYAL NAVY'S GUNBOAT DIPLOMACY IS FUELING CLIMATE CRISIS." https://declassifieduk.org/royal-navys-gunboat-diplomacy-is-fueling-climate-crisis/. (검색일: 2021.11.30.).

철회할 경우 10조원 안팎의 예산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항모 제조 과정과 여러 함정과 잠수함이 경항모를 호위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탄소 배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면서 그 의제 가운데 하나를 기후 위기 대처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세계 6위 이내의 군사력 보유국이자 7위 이내의 탄소 배출국들이다. 또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70% 정도를 이들 다섯 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역내 군비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동북아야말로 그린 데탕트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많은 나라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히듯이 기후 위기는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린 데탕트는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과거 6자회담 워킹그룹 가운데 하나로 '동북아 평화안보체계'가 있었던 만큼, 이 그룹에서 그린 데탕트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구적 과제와 가치를 한국 외교의 중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중관계에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입지를 강화하려면 선도적인 '의제 설정' 역량과 용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미국의 의제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발 의제에 끌려다닐수록 중국발 의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사드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선도적으로 의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처와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그린 데탕트가 대표적인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들 의제는 미국과 중국도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다방면에서 경쟁·대립하면서도 기후 위기 대처에는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또 경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경쟁이 무력 충돌과 같은 대결로 악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지배적인 요소가 되면서 협력은 지지부진한 현실이고, 그 중심에는 군비경쟁이 똬리를 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중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갈수록 거주 불능으로 향하는 지구를 둘러싼 허망한 경쟁을 멈추고 살 만한 지구를 위해 협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자 군비증강 당사자들이라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두 가지 문제 사이의 '악순환'을 멈추고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긴장 완화와 탄소 배출 감축의 '선순환'을 도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두 나라 사이의 무력 충돌은 양국 사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나라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위험이 크다며 전쟁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당장 이러한 요구를 내놓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선민후관(先民後官)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국회, 언론, 학계가 먼저 이러한 의제를 공론화하고 미중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정부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